

시황저격



이재원 Market Analyst
jaewon2.lee@yuantakorea.com

미국 중간선거, 두 달 앞서 대비하는 법

2018년과 닮았지만 더 불리해진 공화당, 생활비가 표를 움직일 전망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현재 정치구도는 2018년 트럼프 1기 중간선거 직전과 유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당시 40%보다 낮은 34% 수준이고 민주당은 의회 투표 의향에서도 공화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 탈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 공화당 우위였던 아이오와와 텍사스 상원 선거까지 접전으로 이동하며 상원 지배권이 더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유권자의 48%가 생활비를 최우선 문제로 지목했고, 이란전쟁 이후 높아진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물가와 소비심리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두 달에는 전쟁 자체보다 유가와 생활비의 안정 여부가 공화당 지지율과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민주당 승리의 의미는 정책 폐기보다 추가 재정책확장의 제약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한다고 트럼프 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복지와 보조금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반면 관세·통상, 대중국 규제와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25년 통과된 OBBBA는 감세 중심의 확장재정으로 2025~2034년 누적 연방적자를 약 4.2조달러 확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적자 역시 중간선거 이전에 상당 부분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승리의 의미는 새롭게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추가하기 어려워지면서 향후 국채 공급과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재무부가 장기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채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높은 금리가 주택과 소비, 기업 금융비용을 통해 경제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 불확실성 완화 기대, 한국은 금리와 AI·전력 인프라에 주목

과거 중간선거에서는 선거 전보다 선거가 끝난 뒤 시장 반응이 더 일관됐습니다. 1990년 이후 9차례 중간선거에서 선거일 이후 수익률은 개선됐고 VIX도 선거 이후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어느 당이 이겼는지보다 선거가 끝나면서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시장에 반영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선거 결과 자체보다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 원/달러 환율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는 금융여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영향은 다릅니다. 헬스케어와 일부 친환경·소비 업종은 의회 의존도가 높아 선거 결과에 민감하지만, 반도체·AI·전력 인프라·방산은 미중 기술경쟁과 국가안보라는 초당적 정책 필요성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AI 투자는 연산-전력-발전-저장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제조업 수요를 동반하고, 미국 전력망 투자 확대와 탈중국 역시 양당의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는 선거 이후 불확실성 완화와 금융여건 안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간선거 영향이 제한적인 AI·반도체와 전력기기·원전·ESS 등 구조적 수혜 업종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990년 이후 중간선거의 역사, 2018년과 닮은 2026년

11월 3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이자 사실상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다. 1990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를 보면 통합정부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보다 적어도 한 개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며 분점정부로 전환된 사례가 더 익숙하다. 1994년 클린턴, 2006년 조지 W. 부시, 2010년 오바마, 2018년 트럼프, 2022년 바이든 모두 중간선거를 거치며 의회 지배력의 일부를 잃었다.

현재는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통합정부라는 점에서 2018년 트럼프 1기 중간선거 직전과 정치구도가 거의 동일하다. 당시 민주당은 하원에서 41석을 추가하며 공화당 통합정부를 분점정부로 바꿨다. 정치구도만 놓고 보면 2026년 역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2018년과 동일한 경로가 재현되는 셈이다.

차이는 지지율이다. 트럼프 2기 지지율은 2018년 같은 시점보다 낮고, 민주당은 의회 투표의 향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같은 통합정부 출발점이라도 정치적 방어력은 2018년보다 약하다.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2018년의 반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벤트로 봐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 1955년부터 약 40년간 하원 다수당 유지. 1994년 공화당 하원 탈환 이후 현재와 유사한 양당 간 의회 경쟁 구도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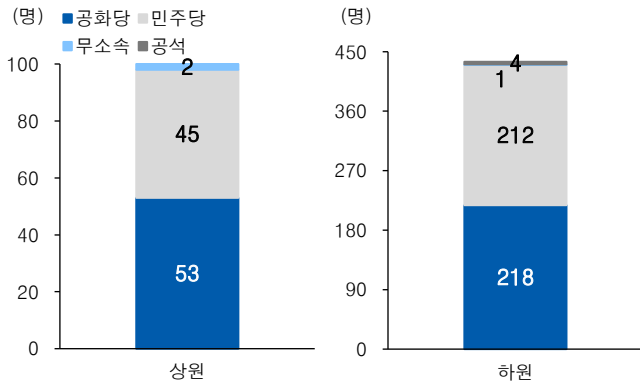
년도	대통령			선거 전 상원	선거 전 하원	선거 후 상원	선거 후 하원	선거 전 정부구조	선거 후 정부구조	핵심 변화
1990	조지 H.W. 부시	공화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분점	분점	민주 양원 유지
1994	빌 클린턴	민주		민주	민주	공화	공화	통합	분점	공화 양원 탈환
1998				공화	공화	공화	공화	분점	분점	공화 양원 유지
2002	조지 W. 부시	공화		민주	공화	공화	공화	분점	통합	공화 상원 탈환
2006				공화	공화	민주	민주	통합	분점	민주 양원 탈환
2010	버락 오바마	민주		민주	민주	민주	공화	통합	분점	공화 하원 탈환
2014				민주	공화	공화	공화	분점	분점	공화 상원 탈환
2018	도널드 트럼프	공화		공화	공화	공화	민주	통합	분점	민주 하원 탈환 (* 현재와 매우 유사)
2022	조 바이든	민주		민주	민주	민주	공화	통합	분점	공화 하원 탈환
현재	도널드 트럼프	공화		공화	공화	?	?	통합	?	민주 하원 탈환 유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이 선거 대상이다. 현재 의회 구성은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친민주 무소속 2석이며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 친공화 무소속 1석, 공석 4석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 친화적 체제다. 민주당은 기존 민주계 공석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하원에서 3석, 상원은 4석 추가 확보가 다수당 탈환을 위해 필요하다. 5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의 의회 투표 의향 우위가 겹치며 하원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빠르게 높아졌다. 하원 탈환 자체는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반면, 최근에는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지가 더 큰 변수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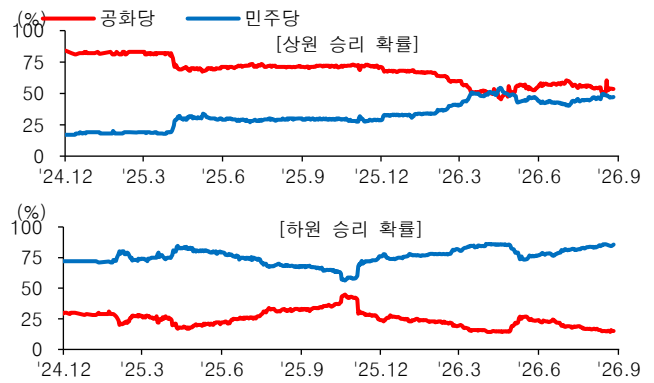
특히 8월 들어 기존 공화당 우위였던 아이오와와 텍사스 상원 선거까지 접전 지역으로 전환했다. 결국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 여부보다 상원까지 장악해 트럼프 2기 후반의 인사권과 정책 추진력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는지에 있다.

공화당 친화적 체제인 현재 미국 상하원 의석 구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정당별 상·하원 승리 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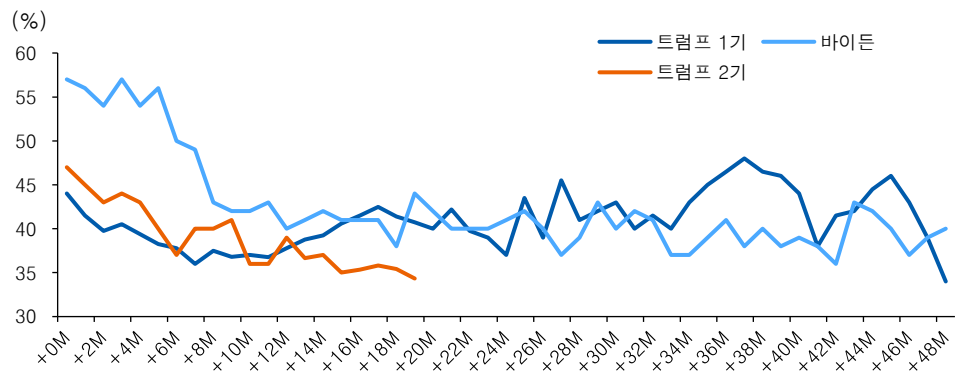
자료: Kalsh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1기 Vs. 2기 정치구도 및 상황 비교

	2018년 중간선거	2026년 중간선거
대통령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선거 전 정부	공화당 : 대통령 · 상원 · 하원 (Red Sweep)	공화당 : 대통령 · 상원 · 하원 (Red Sweep)
정부구조	공화당 통합정부	공화당 통합정부
트럼프 지지율	40% (2018년 8월)	34% (2026년 7월)
의회 투표의향	민주당 우위	민주 43% vs 공화 37%
하원	민주당 +41석, 탈환	민주당 탈환 가능성 우세
결과	통합 → 분점정부	통합 → 분점정부 (예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추이



자료: 갤럽,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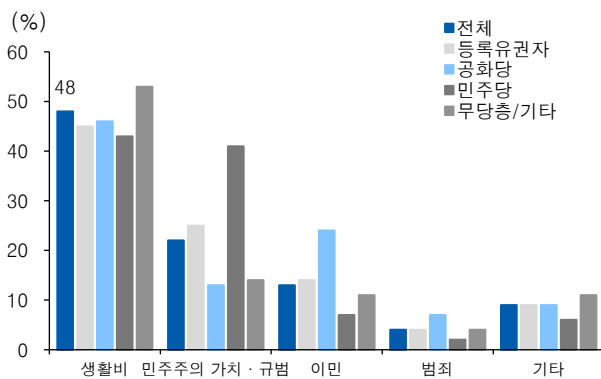
이번 선거는 결국 생활비와 물가가 핵심

정치구도만으로 선거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48%가 중간선거의 최우선 이슈로 생활비를 꼽았고, 연초 대비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생활비 문제를 더 잘 다룰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앞섰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낮은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유권자가 체감하는 경제 문제에서 방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CPI 내 비중보다 정치적 체감도가 높다. 주거비나 의료비보다 비중은 작더라도 가격이 매일 주유소 간판에 노출되고 즉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란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휘발유 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 소비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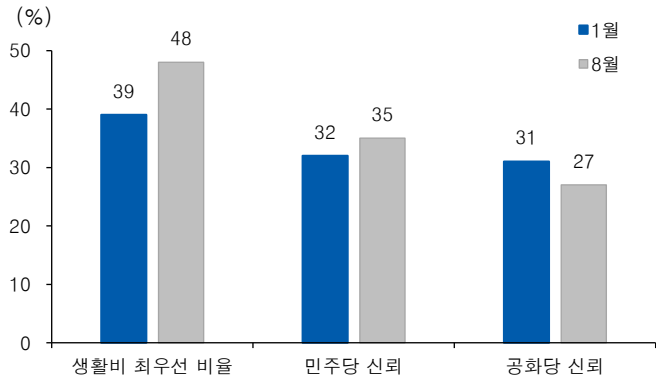
따라서 남은 두 달은 기름값과 생활비가 얼마나 안정되는지가 더 직접적인 정치 변수다. 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가격, 물가 기대와 소비심리는 단순한 매크로 지표가 아니라 중간선거 판세와 연결된 가격 변수로 볼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갈등 종결을 위해 트럼프가 최선을 다할 이유다.

유권자 주된 관심사는 생활비 : 물가는 금리 뿐 아니라 중간선거에도 중요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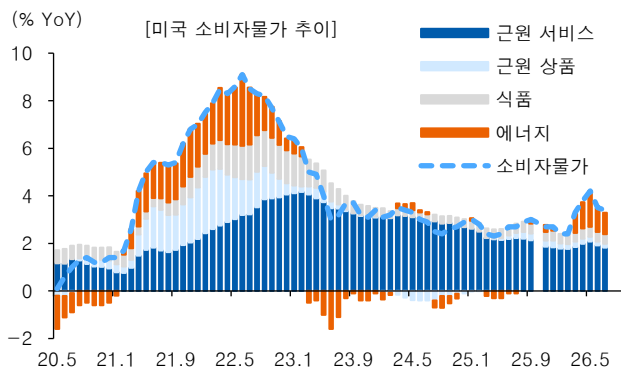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월 대비 최근 증가한 생활비 불만과 민주당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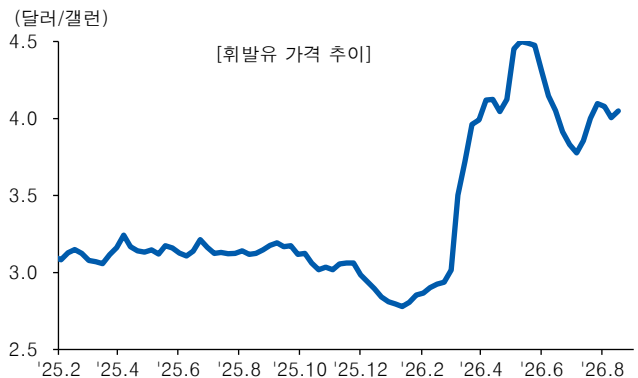
자료: Kalsh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은 에너지 중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은 집권 정당 및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자료: Kalshi,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정책별 중간선거 영향은 의회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

중간선거를 시장과 연결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정책의 의회 의존도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복지제도 변경, 연방예산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감세와 지출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키기는 훨씬 어려워진다. 상원까지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주요 인사와 연준·법원 인준까지 제약이 넓어진다.

반대로 관세와 통상, 이민 단속, 외교·군사정책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직접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 의회 구성이 바뀐다고 해서 트럼프 관세정책이 바로 사라지거나 이란 및 대중국 정책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 승리는 트럼프 정책의 전면 폐기보다 의회가 필요한 정책의 제약 강화로 해석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식시장 전체 방향에서 중요한 정책은 감세·재정, 관세·통상, 외교·이란 세 가지다. 재정은 국채 공급과 장기금리, 관세는 물가와 기업마진, 이란은 유가와 기업인플레이션을 통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 선거 결과 자체보다 어떤 정책의 제약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다.

의회 필요 정도가 높은 정책일수록 중간선거 영향이 크다

정책	의회 필요 정도	중간선거 민감도	금융시장 중요도	주요 영향 업종·변수
감세·재정지출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미 국채금리, 달러, 성장주·가치주 전반
친환경·보조금 정책	높음	높음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금융규제	중간	중간	★★★	은행, 증권, 가상자산, 금융주
관세·통상정책	낮음~중간	낮음	★★★★★	자동차, 소비재, 산업재, 물가, 달러
대중국 기술규제	낮음~중간	낮음	★★★★	반도체, AI, 장비, 중국 관련주
외교·이란 정책	낮음	낮음	★★★★★	유가, 물가, 장기금리, 방산·에너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정책별 중간선거 이후 시나리오

정책	핵심 경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 전망
감세 · 재정지출	재정적자 확대 → 국채 발행 증가 → 장기금리 상승 → 주식시장 부담	민주가 하원을 가져가면 추가 감세 · 대규모 재정확대 가능성 축소. 선거 결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관세 · 통상정책	관세 인상 → 수입물가 · 기업비용 상승 → 물가 · 마진 압박	행정부 권한 비중이 높아 민주가 의회를 장악해도 트럼프 관세정책은 상당 부분 지속 가능
외교 · 이란 정책	지정학적 갈등 → 유가 상승 → 물가 자극 → 장기금리 상승 → 주식시장 부담	의회 구성보다 대통령 · 행정부 판단이 중요. 선거 결과보다 전쟁 · 협상 진행 상황이 시장에 더 직접적 영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재정적자 확대는 민주당 의석 탈환에도 지속될 전망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한다고 미국 재정적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중간선거 이전에 이미 대규모 재정확대가 법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산처는 2025년 통과된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2025~2034년 누적 연방적자를 약 4.2조달러 더 늘릴 것으로 추정한다. 직접적인 기초재정적자 확대가 약 3.4조달러, 추가 이자비용이 약 0.7조달러에 이른다.

OBBBA는 단순한 지출 확대보다 감세 중심의 확장재정이다. 복지지출 축소와 일부 재원 절감이 포함돼 있지만 세수 감소 규모가 더 커서 전체 재정효과는 적자 확대다. 성장과 기업이익에는 우호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채 발행과 이자비용을 늘려 장기금리의 구조적 부담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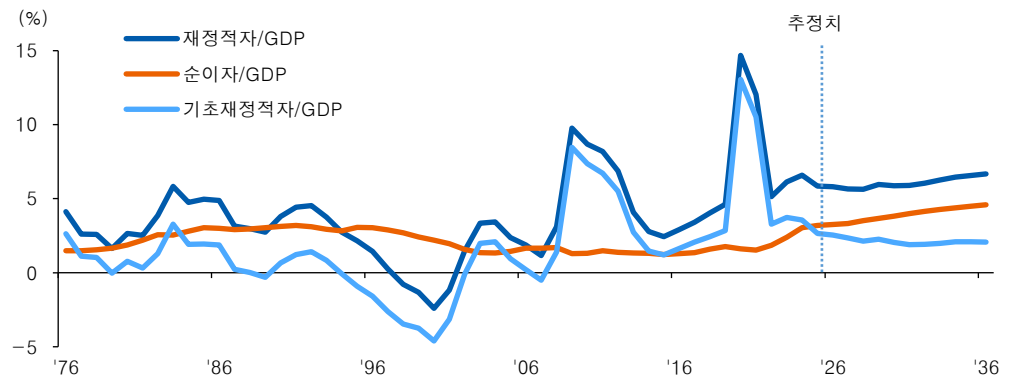
따라서 민주당 승리의 채권시장 의미는 재정 정상화보다 추가 확장의 제약에 있다. 이미 확정된 OBBBA 효과는 남지만 새롭게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이 추가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분점정부 전환이 장기금리에 우호적일 수 있는 이유도 적자를 당장 줄이기보다 추가 확대를 막는 데 있다.

트럼프 감세정책은 성장에 우호적이지만 재정적자와 국채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동반한다. 최근 장기물 금리 상승은 재정 우려와 장기채 공급, AI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등이 겹치며 기간 프리미엄을 자극한 결과다.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빠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은 주식 할인율과 모기지·기업조달 금리를 동시에 높이는 만큼 시장이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부담을 방치하기 어렵다. 재무부는 8월 19일, 10~30년 만기 장기국채의 회당 바이백 한도를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확대했다. 적용기간은 9월 9일부터 중간선거 종료 직후인 11월 4일까지다. 약 9,400억달러 규모의 TGA 현금을 되사기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장기금리 상승은 주택과 소비, 기업 금융비용을 통해 생활비 문제로 전이된다. 재정확대의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한 감세가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유권자의 체감경기를 훼손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베센트 재무부의 장기채 시장 안정 유인이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필요가 겹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

GDP 대비 재정 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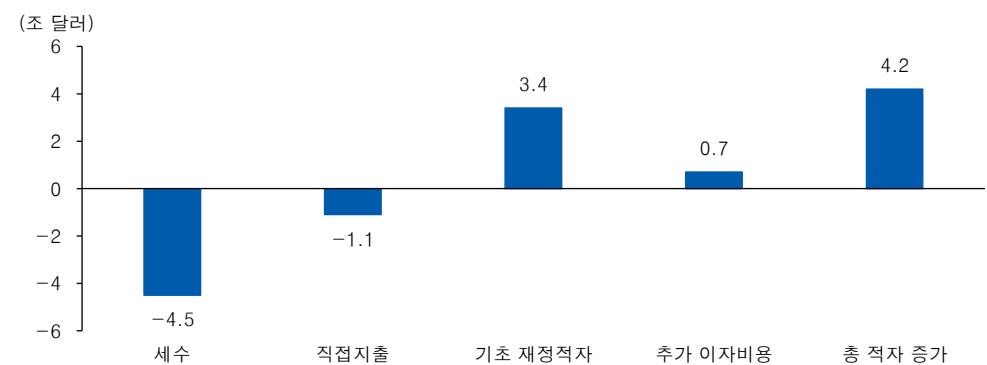
자료: LSEG Workspace, 미 의회예산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미 의회예산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OBDBA 통과 이후 2025~2034년 누적 효과 : 결국 재정적자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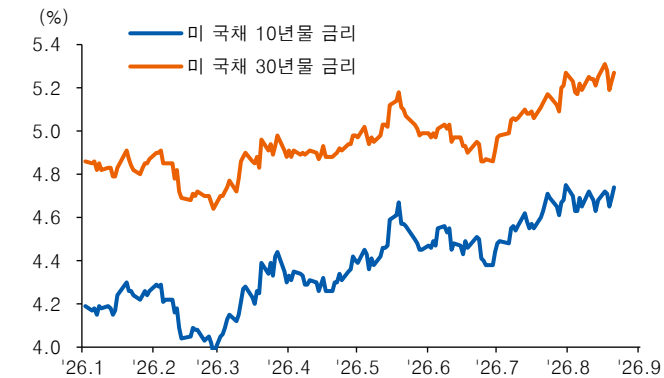
자료: 미 의회예산처 추정,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장기채 금리 안정화 조치 및 내용

시점	조치	핵심 내용
2026.05~08	장기채 발행 규모 동결	재정적자 확대에도 10·20·30년물 등 쿠폰채 발행 규모를 향후 수개 분기 현 수준 유지
2026.05~	단기채 중심 조달	추가·계절적 자금수요를 T-Bill·CMB 중심으로 대응
2026.08.19	장기채 바이백 2배 확대	10~30년물 바이백 한도를 회당 20억 → 최소 40억달러로 확대
2026.08.24	TGA 활용 검토	약 9,400억달러 TGA 현금을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 가능성 언급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연초 이후 장기채 금리 지속 상승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재정적자 확대 및 AI 회사채 발행이 키운 베어 스티프닝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간선거 종료 후 불확실성 완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나 변수 존재

중간선거는 선거 전보다 선거가 끝난 뒤의 시장 반응이 더 일관됐다. 1990년 이후 9차례 중간선거에서 선거일 100일 이전 S&P500 평균 수익률은 +1.7%에 그쳤다. 반면 선거 이후 15일 평균 수익률은 +1.8%로 9번 중 7번 상승했고, 200일 평균 수익률은 +18.2%, 300일 평균 수익률은 +21.4%다.

VIX 역시 선거를 전후해 고점을 낮추는 경향이 반복됐다. 어느 당이 이겼는지보다 선거가 끝나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시장에 반영됐다. 정책 방향의 좋고 나쁨보다 미뤄졌던 포지션 조정과 위험 프리미엄 정상화가 먼저 나타나는 구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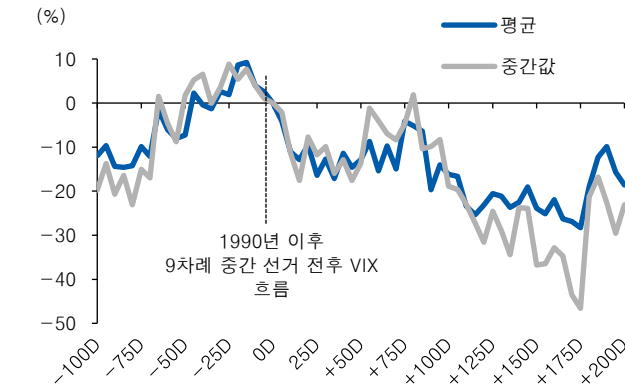
다만 과거 평균은 방향성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다. 2026년에는 이란과 유가, 연준 정책, 재정적자와 장기채 공급이라는 큰 변수가 동시에 존재한다. 선거 종료만으로 상승을 단정하기보다 불확실성 완화가 다른 매크로 변수의 안정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 해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시장에도 우호적이었다. 과거 KOSPI와 KOSDAQ 모두 중간선거 이후 평균 수익률이 개선됐다. 미국 정치 이벤트가 끝난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글로벌 자금의 포지션 정상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국시장은 현재 선거 결과보다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 원/달러 환율의 경로가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 추가 재정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면 장기금리와 달러 상승 압력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장기금리는 연준과 유가, 물가, 장기채 공급이 더 크게 좌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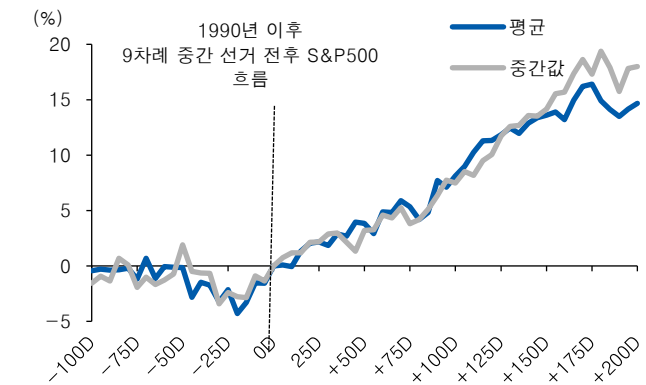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은 중간선거 이후 실적과 함께 미국 국채금리에서 원/달러 환율, 다시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먼저 봐야한다. 환율이 안정돼도 금리와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외국인의 추세적 순매수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 중간선거의 주식시장 영향은 선거 결과 자체보다 금리와 환율 등 금융여건 변화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간선거 전후 VIX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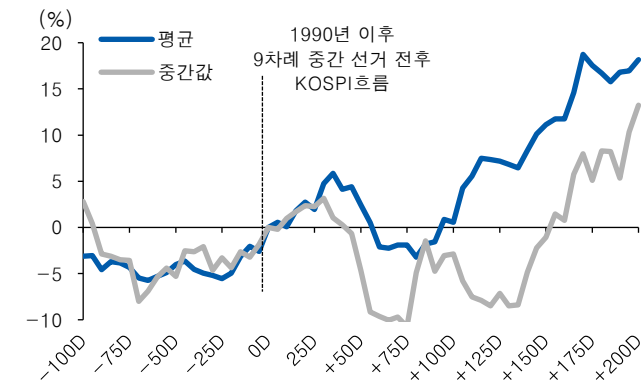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간선거 전후 S&P500 수익률 : 불확실성 완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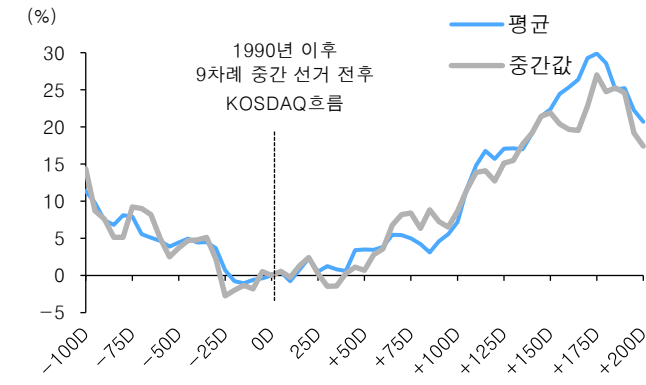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간선거 전후 KOSPI 수익률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중간선거 전후 KOSDAQ 수익률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업종별로는 선거 결과보다 정책의 의회 의존도가 중요하다. 헬스케어와 일부 친환경·소비 업종은 복지예산, 보조금, 세제처럼 의회가 직접 결정하는 부분이 많아 선거 결과에 민감하다. 반면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는 미중 기술경쟁과 국가안보라는 양당 공통 과제에 가깝다. 방산 역시 지정학과 안보 수요의 영향이 더 크다.

자동차와 배터리는 관세 민감도가 높지만 관세는 대통령 권한 비중이 큰 만큼 민주당이 의회를 가져가도 위험이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과 전통에너지는 의회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와 규제기관, 금리와 유가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결국 복지·보조금·세제 등 의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선거 결과에 더 민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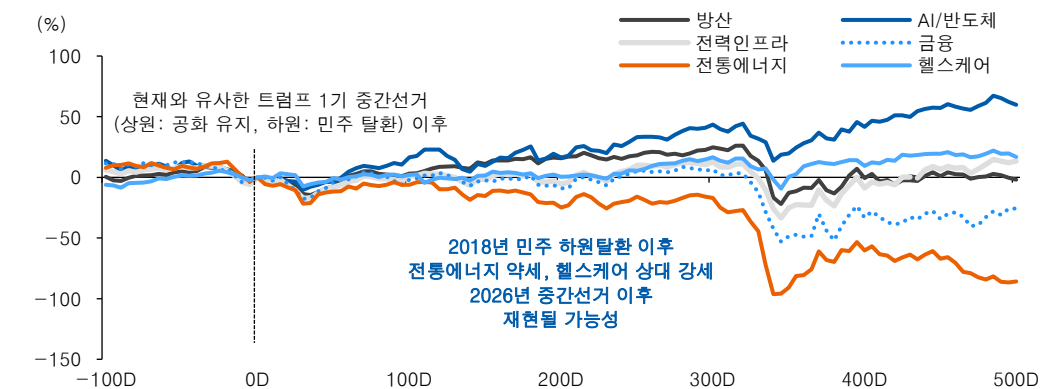
2018년 트럼프 1기 중간선거 이후에는 헬스케어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전통에너지와 금융은 약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기 구간의 업종 수익률에는 코로나와 유가 급락 등 선거 외 요인이 함께 포함된다. 과거 업종 흐름은 방향성의 참고자료로 쓰되, 2026년에는 현재 정책의 의회 의존도와 거시 변수로 다시 판단하는 편이 타당하다.

정책의 의회 의존도 높다면, 민주 하원 탈환시 수혜 여부 파악 가능

업종	의회 의존도	핵심 변수	설명
방산	낮음	지정학·국방지출	안보 수요는 초당적
AI·반도체	낮음	AI 투자·미중 기술경쟁	정책 연속성 상대적으로 높음
전력 인프라	낮음~중간	데이터센터·전력 수요	AI 인프라 투자 영향
금융	중간	규제·금리·재정	행정부/의회 모두 영향
전통 에너지	중간	유가·규제·지정학	선거보다 유가 영향이 더 큼
헬스케어	높음	Medicaid·ACA·예산	의회 법률·예산 의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1기 중간선거 이후 업종별 주가 흐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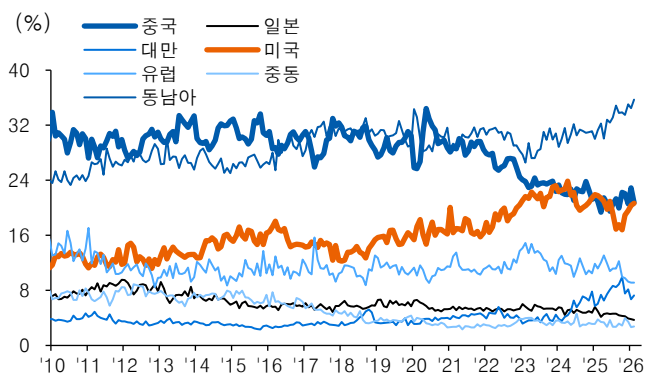
중간선거 영향이 제한적인 초당적 아젠다 ①AI ②전력 ③탈중국

한국은 주요국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도 대미 수출 비중 확대와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제조 공급망 내 존재감을 높였다. 중국의 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과 기타 지역으로 수출처를 넓혀온 구조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국면에서 다시 강점으로 작용한다.

AI 투자 확대는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연산을 위한 HBM·DRAM·NAND, 전력 공급을 위한 변압기와 전선, 발전설비와 원전·SMR, 전력 저장을 위한 ESS와 배터리까지 대규모 제조업 수요를 동반한다. 한국은 AI Capex의 연산-전력-발전-저장 전 과정에 경쟁력 있는 제조업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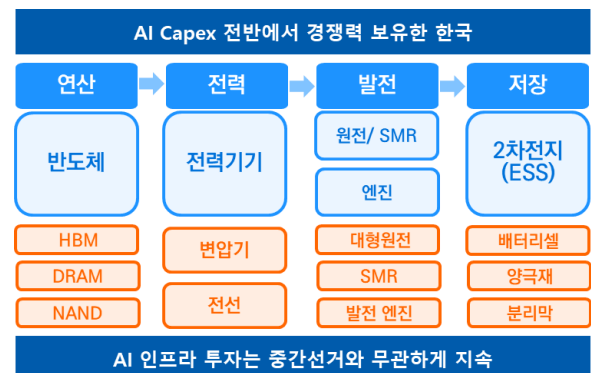
AI 투자는 기업의 데이터센터 증설과 미중 기술경쟁에 기반한 구조적 투자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의회 구성이 바뀌더라도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중간선거가 바꾸는 것은 재정과 보조금의 강도이지 AI 투자 사이클 자체가 아니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혜 받는 한국 제조업, 글로벌 교역 내 존재감 확대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I Capex, 중간선거 영향력 없이 한국 제조업이 책임진다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은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또 하나의 초당적 정책이다. 공화당은 전력안보와 AI 전력수요, 대중국 견제를 강조하고 민주당은 전력망 현대화와 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정을 강조하지만 ‘전력망 투자 확대와 중국 의존도 축소’라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정책도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6년에도 4월 DPA 전력망 공급망 강화 조치에서는 변압기와 송전선, 고압차단기, 전력전자 등을 국가안보 필수자원으로 지정했고, 8월 전력망 안보 행정명령은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외국인 장비의 신규 구매·수입·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비EV용 리튬이온배터리에는 2026년부터 Section 301 관세 25%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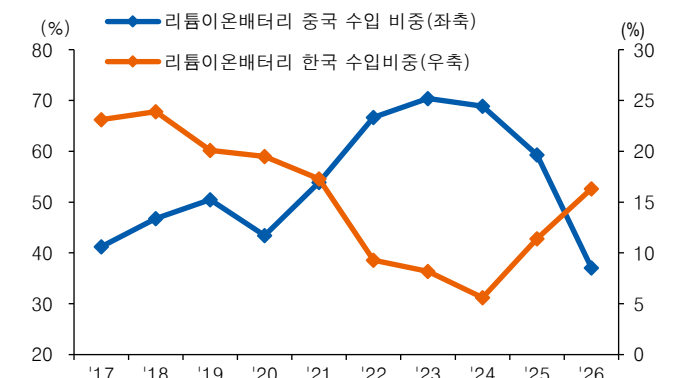
실제 미국 수입 구조에서도 전력기기와 ES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중국산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한국산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대체 공급자 역할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 여부보다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와 탈중국이라는 초당적 흐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미중 전력망 정책 강화, 수혜 국가는 한국

미국 조치	실제 내용	국내 관련 업종
2026.4.20 DPA 전력망 공급망 강화	변압기 · 송전선/도체 · 변전소 · 고압차단기 · 전력전자 등을 국가안보 필수자원으로 지정. 정부 구매 · 구매약정 ·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 가능	전력기기 · 전선
2026.8.26 전력망 안보 행정명령	변압기 · 계통연계 인버터 · BESS · 고압차단기 · 제어시스템 등 가운데, 중국 등 안보우려국과 연계되고 안보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장비의 신규 구매 · 수입 · 설치 금지 가능	전력기기 · ESS
중국산 非 EV 리튬이온배터리 관세	중국산 비(非)EV 용 리튬이온배터리에 2026년부터 Section 301 관세 25% 적용	ESS 용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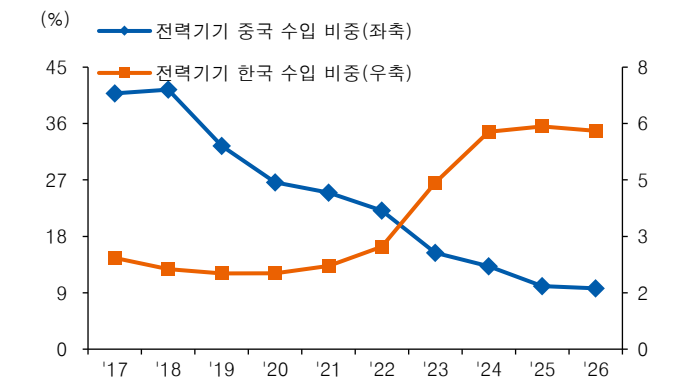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공화당, 민주당 상관 없이 미국의 탈중국 기조는 통일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공화당, 민주당 상관 없이 미국의 탈중국 기조는 통일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결론적으로,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은 커지고 있으나 민주당의 승리가 트럼프 정책의 전면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추가 재정확장 가능성의 축소와 이에 따른 장기금리 부담 완화 여부다. 과거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 해소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었으며 한국 주식시장도 불확실성 해소로 유의미한 상방압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 장기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 및 전력 인프라, 탈중국 기조는 초당적 투자 필요성이 높아 중간선거와 무관하게 구조적 수혜 가능성이 있다.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